광주 남구 7·28 보선 오늘부터 본격 선거전

민주 VS 비민주, 의외로 뜨거운 혈투

광주 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진상·가운데)는 14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7·28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장병완 후보(오른쪽)와 민주노동당 오병윤 후보(왼쪽)가 참석한 가운데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협약식을 가졌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장병완, 조직·중앙당 인사 총동원 주민과 1대1 접촉

오병윤, 강기갑·유시민 등 지원유세 민심잡기 총력

선거기간 짧아 인지도 극복이 관건…투표율도 변수

오는 28일 치러지는 광주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후보 등록 마감과 함께 15일부터 본격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열기가 후끈 달아오를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 장병완 후보 대 비(非) 민주당 단일후보인 민주노동당 오병윤 후보 간 대결로 압축되면서 비민주 단일후보의 파괴력이 어느 정도일지 주목된다.

민노당과 국민참여당 등 야 4당과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14일 여론조사를 통해 비 민주당 단일후보로 민노당 오병윤 후보를 선출하고 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야 4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독점을 깰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각 당 지도부와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이 망라된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할 방침이어서 민주당과의 한판 대결이 예상된다.

◇**양 진영 '총력전'**=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3일간 밖에 되지 않는 만큼 양 후보는 이 기간 동안 모든 조직과 중앙당 인사를 총 동원하는 것은 물론 남구민 접촉을 최대한 늘려가며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을 펼 전망이다.

민주당 장병완 후보는 15일 오후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주선 최고위원, 원혜영 전 원내대표, 김동철 광주시당위원장 등 중앙당과 광주시당 인사들이 총출동해 2012년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만들기 위한 필승 각오를 다질 계획이다.

또한, 조만간 정세균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등 중앙당 유력 인사들이 대거 남구를 찾아 지원유세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장 후보는 "남은 기간 남구민 전체를 만나겠다는 각오로 발로 뛰면서 2012년 정권교체와 반 MB전선의 중심인 민주당 후보를 선택해 줄 것을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등 야 4당과 시민사회단체도 광주 남구를 전략지역으로 정하고 총력전으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후보 등록 마감일인 14일 후보 등록과 함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한 민노당 오병윤 후보는 15일부터 강기갑 민노당 대표와 함께 첫 유세를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개소식에는 강 대표와 곽정숙·홍희덕 국회의원을 비롯한 광주지역 야 4당 대표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 당원·지지자 1천여명이 참석해 승리 결의를 다졌다.

또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국민참여당 인사와 시민사회단체 중앙 인사들도 오 후보 지원유세에 나서는 등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오 후보는 "광주 시민과 남구민의 변화 열망이 강한 만큼 이번 보궐선거에서 광주정치를 새로운 희망의 정치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역민들에게 당선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변수**=남구 보궐선거는 사실상 민주당 조직과 야 4당 및 시민사회단체 진영의 조직 싸움으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짧은 선거기간 동안 얼마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지역에서는 양 후보의 인지도가 현재 별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양 후보들이 남구에서 정치적 활동을 폭넓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노당이 비 민주당 후보 단일화에 앞서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 민노당 오 후보·국민참여당 장우철 후보의 지지도를 합치면 민주당 장 후보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일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장병완 후보의 경우 기획예산처 장관 등 화려한 공직 경력이 있는데다 민주당 조직이 버티고 있는 만큼 단기간에 인지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노당 오병윤 후보도 광주지역 대학 운동권의 '대부'인데다 민주화운동 및 진보정치운동에서 30년 외길을 걸어온 만큼 조직을 동원한 선거전에는 만만치 않은 파괴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투표율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보궐선거 특성상 투표율이 낮은 만큼 인지도 보다는 조직력에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 '4대강 심판론'으로 재보선 승부수

지도부, 공사 현장 방문 이슈 쟁점화 집중

민주당이 7·28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을 하루 앞둔 14일 '4대강 심판론'을 다시 꺼내들었다.

이번 선거를 6·2 지방선거에 이은 '제2의 정권심판'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이날 경기도 여주보 공사현장에서 최고위원-원내대표단-4대강특위 연석회의를 연 뒤 물고기 폐사 현장을 시찰하며 4대강 이슈 쟁점화에 집중했다.

정세균 대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은 4대강 사업을 치수사업으로 하라고 명령했지만 이 정권은 이를 거역하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아직도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무능과 독선에 빠져있는 이 정권을 재보선을 통해 최종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국민 70~80%가 중단하라고 했건만 4대강을 이렇게 파헤쳐 파괴하는 공사야말로 범범행위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4대강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불도저 일자리를 창출했지 사람 일자리 창출은 안됐다"며 사업중단을 촉구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예산국회에서 4대강 예산이 금년보다 훨씬 증액된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삭감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4대강 사업을 전면에 들고나선 데에는 최대 승부처인 서울 은평을의 한나라당 이재오 후보가 과거 '한반도 대운하 전도사'를 자처했다는 점을 겨냥,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포석도 깔려있다.

이미경 사무총장은 오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의 반대가 심한데 '대운하 전도사'로 나선 이 후보를 뽑아줘봤자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는 행동대장 노릇밖에 더 하겠느냐는 비판과 심판의 분위기가 많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은평을 외에도 경인운하가 지나가는 인천 계양을, 남한강에 인접한 충북 충주와 강원 원주를 '4대강 심판지역'으로 묶어 패키지로 공략할 방침이다.

15일에는 은평구 물빛공원에서 정세균 대표를 비롯해 정동영 손학규 김근태 상임고문 등 지도부와 의원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7·28 재보선 대책본부 출정식 및 4대강 공사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가 라운지

"도시철도 2호선 원안대로 추진돼야"

송경종 광주시의원(민주·광산 3)은 14일 강운태 광주시장의 도시철도 2호선 재검토 발언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광주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 자리에서 "도시철도 2호선의 추진방향이 정해지기까지 많은 시민의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다"면서 "도시철도 2호선은 이런 시민의 뜻을 존중해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시내버스 정책에 집중하기 위해 도시철도 2호선 추진을 재검토하겠다'는 강 시장의 발언은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무시한 처사이며, 1호선의 효율적 활용과 신도시 건설로 인해 다핵화된 광주 현실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타당성 조사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부정하는 내부발언이 나오면 국고지원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며 "담당 실무자들이 2호선 건설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방 지하도 활용 검토를"

광주시의회 조호권 의원(민주·북구5)은 14일 "지난 1999년 10월 이후 방치돼 온 서방지하도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이날 열린 제19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최근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서방전통시장과 주변상가의 활성화를 위해 10년째 방치된 서방지하도의 활용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서방전통시장 상인대표와 상가 대표, 전문가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서방지하도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선 안전진단을 포함해 수요조사 및 타당성 여부,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농산물 저온냉동창고·지하주차장 등 활용방안과 관련된 용역이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고 설립 협의체 구성해야"

광주시의회 서정성 의원(민주당·남구2)은 14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광주외국어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해 교육당국, 학부모,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외고 설립을 두고 현직 교육감과 후임 교육감이 충돌하는 모습에 우려가 된다"면서 "외고 설립건은 임기가 4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현 교육감이 급하게 서둘러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교육당국과 학부모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